

09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.
-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.
-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.

정답 ①

부담금은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이다.

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처리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. 이 경우에 수입기관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의무적인 교부금(위탁금)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.

10.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.
- ④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정답 ②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

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㉠ 공용·공공용시설의 설치
- 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
- ㉢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
- 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- ㉤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

11.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ㄱ. 의사결정기관 | ㄴ. 입법기관 |
| ㄷ. 비판·감시기관 | ㄹ. 헌법기관 |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ㄷ, ㄹ

정답 ④

지방의회의 지위

- ① 헌법상의 기관: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다. 헌법(제118조)은 “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. 지방의회의 조직·권한·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- ② 주민대표기관
- 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.
- ㉡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·결정하는 것이므로,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.
- ③ 의사결정기관: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주요정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.
- ④ 입법기관: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.
- ⑤ 행정비판 및 감시기관: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에 대한 행정의 집행을 감시·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.

12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시·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
-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과의 보고
- ③ 시·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
-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이행명령

정답 ②

지방자치법 하에서의 통제방식으로는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, ②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, ③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, ④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,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.

①, ③, ④는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며, ②는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.

13.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?

-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
-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
-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
- ④ 공공성의 강화

정답 ④

제3섹터(민관공동출자사업)은 민간적 요소와 정부적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공동경영을 함으로써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.

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지문 중 방향이 반대인 것을 고르면 정답이다.

공공성의 강화는 행정국가시대의 논리이며, 나머지는 신행정국가시대의 논리이다. 이렇게 고르면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다.

14. 「지방자치법」 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
- ② 행정협의회
- ③ 지방자치단체조합
- ④ 시·도지사협의체

정답 ①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, ③, ④는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다.

15.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“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.”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.
-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.
-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.
-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.

정답 ④

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치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. 당해 지역의 실정은 당해 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.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. 행정학이나 그 각론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론 모두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.

16.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.
-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.
-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.
-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.

정답 ③

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.

17.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.
-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.
-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.
-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.

정답 ③

①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.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감사결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②

④ 주민투표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선거관리위원회가, 자치구·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(주민투표법 제3조 제1항).

18. 「지방자치법」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정답 ④

지방자치법 제26조 제 9항: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9.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.
-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.
-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.
-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.

정답 ③

정답을 고를 때 비교문장부터 확인하라고 하였다.

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공공재의 경우에는 타인의 공동소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.

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. 이러한 문제를 무임승차문제라 한다.

20. 「지방자치법」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.
-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정답 ①

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폐지와 설치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변경, 폐지·설치·분합	법 른
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, 한자 명칭 변경	대통령령
행정시, 행정구·읍·면·동·리의 폐지·설치·분합, 명칭변경, 구역변경	조 례